

대학에
바란다

대학 자율이란 권리 위에 잠자서는 안 된다 *

강홍준 | 중앙일보 사회부문 기자,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장

9월 5일 있었던 일

올해 가장 어이없는 일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9월 5일 있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지면엔 'OO, XX, △△대 퇴출 후보'라는 1면 제목이 뽑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전국 346개 대학 중 내년 정부 재정지원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 당일 아침, 그러니까 신문 보도 전날 한 대학 총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정부가 정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가급적 우리 대학 이름을 써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탁도 있었다.

필자가 어이없다는 건 총장님과의 이런

통화 내용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두 가지다.

현 정부가 들어선 다음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때 '포블러 방식'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 의한 평가 결과가 민간기관(대표적으로는 중앙일보)이 하는 대학평가와 같은 방식인지 우선 화가 치밀었다. 취업률을 포함해 각종 대학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순위를 내는 건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선도적으로 해왔던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할 때는 좀 달라야 한다. 그런데 취업률 20%, 재학생 충원율 30% 등으로 학교를 재단하다니.

모두가 알다시피 취업률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직장은 빠진다. 예를 들어 경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8개월 정도는 교육을 받느라 이 기간 동안엔 건강보험 가입자로 분류가 안된다. 취업률 계산에서 빠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반쪽짜리 지표 등으로 순위를 내 발표를 한 것이다. 그리고 교과부가 재정지원 안 하려면 그냥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로 줄을 세우고 평가를 한다는 건 민간기관이면 몰라도 정부가 하기엔 좀 우스운 일 아닌가. 아마 공무원들이 정보 공시 항목에 있는 대학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엑셀프로그램을 돌려 Z값(표준화점수)이나 T값을 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구한테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9월5일 발표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대학평가를 해본 필자로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더 어이없는 건 이를 대하는 대학의 태도다.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걸린 대학에서는 이후 보직 사표가 줄을 이었다. 교과부의 조치에 항의하려는 길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정부가 몇 개의 지표로 구성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선정한다는 것을 모르는 대학은 없었다. 그 기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부당성을

지적하는 대학들도 있었을 것이나 그 목소리는 미미했다고 본다.

결국 이런 소동을 치른 다음 대학이 한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난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대학 광고 문구가 대부분 신문사 1면 광고 면을 덮었다. 이 정도로 재학생들이나 동문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을까. 또한 이번 발표 결과가 수시 모집에 영향을 미쳤고, 대학들이 이로 인해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으며, 그 피해는 계속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화려한 광고 문구로 만회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혹자는 언론사가, 그리고 필자와 같은 신문기자가 병 주고 약 주냐고 말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대학 등록금 감사를 받는 것인데 이럴 수 있냐고 할 수 있다. 대문짝만하게 대학 이름 뒤에 퇴출후보라고 붙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광고 내는 대학에 대해 태도를 문제 삼느냐고 할 수 있다.

누구 한명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데 이런 몇몇 조악한 지표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발표할 때 어느 대학이 걸릴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걸 생

각해보자. 왜냐면 거의 모든 데이터가 공개 돼 있기 때문이다. 마음만 먹는다면 내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만들어 놓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 중인 '대학 알리미 사이트'엔 수시로 대학 정보가 업데이트돼 올라온다. 친절하게 엑셀로 내려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번에 망신당한 대학 구성원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불상사는 이미 알 수 있었다. 사전에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이에 대해 대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재정지원 대학 발표 과정을 지켜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또 있다. 9월 5일 발표일 2~3일 전 각 대학에 교과부로부터 소식이 왔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통보된 것이다. 서울에 있는 모대학은 수도권 대학끼리 비교해 하위 5% 대학을 선정할 때 그 대학의 데이터 중 지방 캠퍼스의 데이터가 포함돼 있었다는 걸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 그래서 교과부 담당과에 연락해 이번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맞는가. 만일 필자가 담당 직원이었다면 교과부로 쫓아가 드러누웠을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많은 지표로 대학을 평가해서 뒷감당할 자신 있는냐고 따져야 할 것 아닐까. 이러다가는 우리 대

학이 큰 피해를 본다며 대학 보직교수에게 알려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 이런 평가의 부당성을 정부 측에 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는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개와 예측의 시대

심지어 중앙일보 대학평가도 평가에 들어가는 웬만한 데이터를 공개한다. 그것도 평가가 진행되는 중간에 말이다. 이 자료가 맞는지 대학에 물어본다.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대해서도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한다. 대학들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고, 어떤 계산법에 따라 어떤 값이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게 돼 있다. 종합 순위가 신문 지면에 나오기 전날엔 각 대학 평가 담당자들에게 순위뿐만 아니라 지표별 데이터 값도 공개한다.

이러다 보니 일부 대학들은 중앙일보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순위 예측을 한다. 지난해엔 두 대학이 자체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해 순위와 점수까지 맞췄다고 발표했다. 순위는 맞힐 수 있을지 모르나 점수까지 맞힌다는 건 그 대학 자료 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웬만한 자료도 다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지금은 공개와 예측의 시대다. 각 대학의 속살을 잘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쏟아

아저 나와 있다. 이런 정보를 비교해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예측할 수 있다. 정부가 '포퓰러' 방식으로 평가해 지원금을 준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는 한 대학 구성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자마저 정부의 결과 발표에 '한 방 맞았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이 생겼다면 보직교수나 담당자는 뭐하고 있었던 건가.

공개와 예측에 있어서 우리의 수준은 외국 세계 대학평가인 QS나 더 타임스 평가(THEWUR)와 비교도 안 된다. QS나 THEWUR이 평가 중간에 대학에 데이터를 확인 요청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심지어 중앙일보와 제휴관계인 THEWUR 평가의 경우 13개 지표 값을 제휴사인 중앙일보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아무리 세계 대학 평가니 어쩌니 해도 공개와 예측에 있어서는 외국이 한국에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도 필자는 외국 평가 기관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는 대학을 거의 보지 못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닐까.

대학 자율은 지켜야 할 가치다

지난 8~9월 감사원이 전국 66개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감사를 벌이면서 대학의 자율

문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감사원이 재정지원을 근거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엔 감사의 범위가 전방위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려 했으나 결국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내뱉야 별 소득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사실 어느 정권에서도 이번처럼 전방위적인 대학 감사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학 관계자들의 부글부글 끓는 심정은 여러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느낄 수 있었다. 감사원 감사나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발표 등의 일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대학은 자존심을 다쳤다는 말이 나왔다. 대학 자율을 앞세웠던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든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대학 자율은 학문의 자유처럼 소중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사회를 바꿀 아이디어와 인재는 어디서 나오는가, 대학밖에 없다. 대학에 자율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율은 누가 지켜야 할까. 정부가 법으로 지켜야 할까. 그보다 앞서 대학이 스스로 자존심과 자율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하는 평가가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강하게 말해야 한다. 감사원 감

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면 그렇다 는 응당 대학이 누려야 할 권리 위에서 잠자 고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 대학 자율이라 서는 보호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필자소개

강홍준 | 중앙일보 사회부문 기자, 중앙일보 대학평가팀장

강홍준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 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에 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중앙일보에 입사에

다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를 지낸 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대학평가팀장을 맡아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진 행했다.